

##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정세 전망과 정책방향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

Online Series CO 11-35

김정일 위원장이 12월 17일 8시 30분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정오 발표했다.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의 정세 인식, 후계구도 전망, 정책방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 1. 북한의 정세 인식

절대권력자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에게 엄청난 위기다. 김정일의 사망이후 만 이틀이 지난 후에서야 북한이 사망소식을 발표한 것은 절대권력자의 공백으로 인한 결정과정의 지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 사망 시에는 김정일이라는 권력자가 상황을 주도하여 장례절차 등에 관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김정일 자신이 사망하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그를 대체해 권력 공백을 메우며 사태수습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 없게 된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일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을 발표하던 날 당일 오전 9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내부결속을 다지고 외부에 대해 힘을 과시하는 경고성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의학적 결론서’를 통해 “겉싸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고 사인을 소상히 밝힌 것 역시 사망원인을 둘러싼 의혹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김정일에 대한

애도 분위기보다는 김정은의 영도체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 사망 시에는 김일성에 대한 애도가 압도적인 분위기였고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었다. 북한은 김정일을 애도하며 김정일에 매달리기 보다는 김정일 없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 더 고민하고 있는 형국이다.

## 2. 김정은 승계 전망

북한이 김정일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영도력을 강조한 것은 김정은의 공식 승계가 앞당겨질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정일의 승계 과정처럼 3년 이상의 조문기간을 정하지 않고 승계 작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내년 4.15 행사이전에는 승계 구도가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승계 작업이 속개된다면 김정은은 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권력승계가 지연될 경우 입계 될 권력약화 현상에 대한 우려에서 공식 승계 조치가 조기에 단행될 수 있다. 즉, 취약한 권력기반이 오히려 승계과정 가속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권력승계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장성택 등에 의해 지지 받지 못할 경우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승계의 시기와 무관하게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는 예견된 상황으로 무난히 완수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이후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에 진력하여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진력해 왔다.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장이 국정의 책임자임을 규정하였고, 2010년 9월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하였다.

정치적으로 당, 군, 보위부 등 각 핵심기관들을 상호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 속에 이들 조직이 김정은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안배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고, 북한의 당과 군 등 부문에서의 주요 엘리트들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단결하여 체제안정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 지원 역시 김정일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목할 것은 북한이 장의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김정은을 맨 먼저 호명하고 유일하게 동지 칭호도 붙임으로써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다.

## 3. 북한의 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

북한은 일단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주력하면서 소극적인 대내외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우라늄 농축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미-북간 합의를 추진할 동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대남 정책이나 대미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성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면서 경제적 궁핍을 완화해 보려 노력 할 것이다. 축적된 주민들의 불만을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향후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 선군정치와 김정일 유훈통치가 지속되는 나쁜 상황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부 갈등이 우리경제와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더 나쁜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당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지위 공식승계 이전에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되, 공식승계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타진하는 차분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